

[별첨 2] 2023년 제4회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



사업계획서

목 차

<예비타당성조사>

■ 국토교통부	1
1.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	2
2. 용문~홍천 광역철도 사업	3
3. 위례삼동선 건설사업	4
4. 거제~통영 고속도로 신설사업	6
5. 중산간도로 확장(봉개동~와산리) 건설사업	7
6. 중산간도로 확장(귀덕리~상가리) 건설사업	9
■ 산업통상자원부	11
7. R&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	12
■ 환경부	14
8.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	15
■ 산업통상자원부	17
9.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	18

〈사업계획 적정성 검토〉

■ 환경부22

10.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23

<예비타당성조사>

국토교통부

1.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속철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반철도 <input type="checkbox"/> 광역철도		
② 총사업비 (국고)	5,217억원 (국고 : 5,217억원)	③ 사업기간	'25년~'31년 (7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
	지자체·기관		
⑤ 사업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하여 부산·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신공항 접근성 향상 ○ 부산신항만 및 인근 산업단지(녹산·신호·화전 등)의 동해축 철도 물류 운송 인프라 구축 		
⑥ 성과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지표명: 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로 철도수요 증가 ○ 측정 산식: 시행 시 철도수요 - 미시행 시 철도수요 ○ 측정 방법: 미시행 시 대비 시행 시 철도수요 예측 		
⑦ 추진경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근거 :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신규사업 반영(21.7)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		
⑧ 사업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내용 :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* 사업위치 : 부산광역시 일원 ○ 사업물량 :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복선전철 		
⑨ 사업추진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(국토교통부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: 예비타당성조사 →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→ 기본설계 → 실시설계 → 공사착공 		
⑩ 자원조달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형태 : 정액 지원 ○ 자원분담 : 국고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100% ○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: 철도영업수입 		
⑪ 사업운영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주체 : 미정(향후 선정) ○ 운영방안 : 운영주체 선정 후 수립예정 		
⑫ 사전용역	○ 수행		
⑬ 사업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산·울산과 가덕도 신공항간 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공항 접근성 향상 ○ 부산신항만에서 동해축으로 이동하는 철도물류 운송거리 단축을 통해 철도물류 경쟁력 확보 및 철도수송분담률 증대 		

2. 용문~홍천 광역철도 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용문~홍천 광역철도 사업 (광역철도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8,442억원 (국비 : 5,909억원, 지방비 2,533억원)	③ 사업기간	'27년~'34년 (8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 지자체· 기관		
⑤ 사업목적	○ 철도 미수혜지역인 강원 홍천지역↔수도권간 철도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, 낙후지역인 홍천군의 인적·물적 교류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촉진		
⑥ 성과지표	○ 성과지표명 : 신규 철도 서비스를 통한 철도수요 증가량 ○ 측정 산식 : 시행 시 철도수요 - 미시행 시 철도수요 ○ 측정 방법 : 미시행 시 대비 시행 시 철도수요 예측결과		
⑦ 추진경위	○ 추진근거 :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('21.7)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사전타당성조사 시행		
⑧ 사업규모	○ 사업내용 : 용문~홍천간 광역철도 신설 ○ 사업물량 : 양평 용문역~홍천간 32.7km 단선전철		
⑨ 사업추진체계	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(국토교통부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: 예비타당성조사 →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→ 기본설계 → 실시설계 → 공사착공		
⑩ 자원조달방식	○ 지원형태 : 분담방식 ○ 자원분담 : 국고/지방비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70% ○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: 철도영업수입		
⑪ 사업운영체계	○ 운영주체 : 미정(향후 선정) ○ 운영계획 : 운영주체 선정 후 수립 예정		
⑫ 사전용역	○ 수행		
⑬ 사업기대효과	○ 철도서비스가 없는 양평, 홍천군 지역의 철도수혜지역 확대로 교통불편 해소 ○ 낙후된 양평, 홍천군 지역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에 따른 인적교류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		

3. 위례삼동선 건설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	위례삼동선 건설사업 (광역철도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	8,845억원 (국고:6,192 지방비:2,653)	③ 사업기간	2026년 ~ 2032년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	
	지자체 · 기관			
⑤ 사업목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영된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을 경강선과 연결하여 서울도심과 경기 동부권 지역간의 상호 접근성 향상 ○ 월곶판교선, 수서광주선 등으로 인한 경강선 수요 증가 예상으로 위례삼동선 신설로 이용객 분산 필요 ○ 성남시의 재개발·재건축과 광주시의 신규택지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		
⑥ 성과지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지표명: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송수요 증가 ○ 측정 산식: 시행 시 수송수요 - 미시행 시 수송수요 ○ 측정 방법: 미시행 시 대비 시행 시 수송수요(수단분담 변화) 		
⑦ 추진경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-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9. 09. 16 :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 협약(경기도, 성남시, 광주시) - '21. 07. 05 :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고시 - '21. 07. 09 :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고시 		
⑧ 사업규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내용 : ○ 사업물량 : 연장 10.61km, 정거장 5개소(지하4개소, 고가1개소) 		
⑨ 사업추진체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수행주체 : 경기도, 성남시, 광주시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: 예비타당성조사 → 기본계획 승인 → 기본 및 실시설계 → 실시계획 승인 → 보상 및 공사착공 → 공 		

	사완료 → 개통
⑩ 자원조달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○ 자원분담 : 국고(70%), 지방비(30%)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총사업비의 70%(교통시설특별회계) ○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: 경기도, 성남시, 광주시 자체재원 총당
⑪ 사업운영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주체 :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사업자 ○ 운영방안 :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사업자 위탁 운영
⑫ 사전용역	○ 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

4. 거제~통영 고속도로 신설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거제 ~ 통영 고속도로 신설사업		
② 총사업비 (국고)	17,282억원 (국고 : 7,735, 도공 : 9,547)	③ 사업기간	25년 ~ 35년 (공사 7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 도 공		
⑤ 사업목적	○ 국가간선도로망(10x10+6R ²) 남북 5축으로 거제시에서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고, 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어지는 U자형 도로망 완성		
⑥ 성과지표	○ 해당없음		
⑦ 추진경위	○ 추진근거 - 국가도로망 종합계획('21~'30) -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('21~'25)		
⑧ 사업규모	○ 사업물량 : 24.6km, 4차로 신설		
⑨ 사업추진체계	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(국토교통부, 한국도로공사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→타당성평가(12개월)→기본설계(14개월) →실시설계(14개월)→공사시행(신설 7년)		
⑩ 재원조달방식	○ 지원형태 : 보조 (국비에 따른 도공 매칭) ○ 재원분담 : 국고 7,735억원, 도공 9,547억원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공사비 40%, 용지비 100% ○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: 한국도로공사 운영(통행료)		
⑪ 사업운영체계	○ 운영주체 : 한국도로공사 ○ 운영계획 : 전국 고속도로망을 하나로 묶어 통합채산제 운영		
⑫ 사전용역	○ 수행		
⑬ 사업기대효과	○ (혼잡완화) 국가간선도로망(10x10+6R ²) 남북5축 노선으로 거제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국도 14호선의 혼잡완화에 기여 ○ (물류분담) 해양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 ○ (정책지원) 가덕도 신공항('30년 개항까지 연결하는 U자형 도로망을 완성하여 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 배후도시 개발 지원		

5. 중산간도로 확장(봉개동~와산리) 건설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①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중산간도로 확장(봉개동~와산리) 건설사업		
② 총사업비 (국고)	1,381.8억원 (국고:866.2억원 지방비:515.6)	③ 사업기간	2024년 ~ 2031년 (8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 지자체· 기관		
⑤ 사업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국도인 중산간도로(봉개동-와산리) 구간은 지속적으로 교통량 증가하고 있으며, 장래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 용량에 도달하는 구간으로 도로확장 필요 ○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('21.12.30 고시)에 광역도로망인 중산간지역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(구국도 16호선) 구축구간으로 지역간 교통연계전략 기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의 서부지역 균형발전 및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의 연계 강화로 지역간 파급효과 극대화 - 4대 성장거점 간 제주의 외곽 순환도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도로연계로 교통혼잡 완화 및 신속한 이동도로 구축 		
⑥ 성과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지표명: 구국도 정비율 ○ 측정 산식: 실적/목표×100 ○ 측정 방법: 분기별 실적 		
⑦ 추진경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근거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도로법」 제6조(도로건설·관리계획의 수립 등) 및 「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12조 의거 추진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구 국도 도로건설·관리계획 수립 고시(2023.8.9.) 		
⑧ 사업규모	○ 사업물량 : L=8.79km, 폭 20.0m (4차로)		

⑨ 사업추진체계	○ 사업수행주체 : 제주특별자치도
⑩ 자원조달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형태 : 국비+지방비 - 제주특별법 제412조(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) 제⑦항에 근거하여 국비 지원 ○ 자원분담 : 국비(읍면지역), 지방비(동지역)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읍면지역 공사비+용지보상비 ○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: 지방자치단체 유지관리
⑪ 사업운영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주체 : 제주특별자치도 ○ 운영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국도인 중산간도로(봉개동-와산리) 도로확장 시 제주의 동·서지역 균형발전 및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핵심사업인 4대 성장거점 교통 연계전략 마련 - 1차산업·주요 관광지 입지로 지역 생산농산물 원활한 유통과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으로 지역농가 소득 증대 및 관광객 접근성 강화 필요
⑫ 사전용역	○ 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량 증가대비 2차로→4차로 확장으로 교통소통 완화 ○ 제주의 동서지역 균형발전 및 제3차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의 연계강화로 지역간 파급효과 극대화 ○ 4대 성장거점 간 제주 외곽 순환도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도로 연계로 교통혼잡 완화 및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

6. 중산간도로 확장(귀덕리~상가리) 건설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중산간도로 확장 (귀덕리~상가리) 건설사업		
② 총사업비 (국고)	904.8억원 (국고:904.8억원 지방비: -억원)	③ 사업기간	2024년 ~ 2031년 (8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 지자체· 기관		
⑤ 사업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국도인 중산간도로(귀덕리-상가리)는 구간은 지속적으로 교통량 증가하고 있으며, 장래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 용량에 도달하는 구간으로 도로확장 필요 ○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('21.12.30 고시)에 광역도로망인 중산간지역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(구국도 16호선) 구축 구간으로 지역간 교통연계전략 기능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의 서부지역 균형발전 및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의 연계 강화로 지역간 파급효과 극대화 - 4대 성장거점 간 제주의 외곽 순환도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도로연계로 교통혼잡 완화 및 신속한 이동도로 구축 		
⑥ 성과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지표명: 구국도 정비율 ○ 측정 산식: 실적/목표×100 ○ 측정 방법: 분기별 실적 		
⑦ 추진경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근거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도로법」 제6조(도로건설·관리계획의 수립 등) 및 「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412조 의거 추진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구 국도 도로건설·관리계획 수립 고시(2023.8.9.) 		
⑧ 사업규모	○ 사업물량 : L=7.0km, 폭 20.0m (4차로)		

⑨ 사업추진체계	○ 사업수행주체 : 제주특별자치도
⑩ 자원조달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형태 : 국비 - 제주특별법 제412조(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) 제⑦항에 근거하여 국비 지원 ○ 자원분담 : 국비(읍면지역)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읍면지역 공사비+용지보상비 ○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: 지방자치단체 유지관리
⑪ 사업운영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주체 : 제주특별자치도 ○ 운영계획 - 구국도인 중산간도로(봉개동-와산리) 도로확장 시 제주의 동·서지역 균형발전 및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핵심사업인 4대 성장거점 교통 연계전략 마련 - 1차산업·주요 관광지 입지(영어교육도시, 신화역사공원 등)로 지역 생산농산물 원활한 유통과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으로 지역농가 소득증대 및 관광객 접근성 강화 필요
⑫ 사전용역	○ 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통량 증가대비 2차로→4차로 확장으로 교통소통 완화 ○ 제주의 동·서지역 균형발전 및 제3차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의 연계강화로 지역간 파급효과 극대화 ○ 4대 성장거점 간 제주 외곽 순환도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도로 연계로 교통혼잡 완화 및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

<예비타당성조사>

산업통상자원부

7. R&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R&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(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923억원 (국고:461.5 지방비:461.5)	③ 사업기간	'25년 ~ '29년
④ 추진주체	주관부처 지자체·기관		
⑤ 사업목적	○ R&D 비즈니스밸리 지구간 연결도로 구축으로, 울산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및 경부고속철도 KTX역과 HTV일반산업단지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개설사업		
⑥ 성과지표	○ “해당사항 없음”		
⑦ 추진경위	○ 추진근거 : -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(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)		
⑧ 사업규모	○ 사업내용 : R&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○ 사업물량 : L=4.474km, B=20.0m (4차로)		
⑨ 사업추진체계	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(산업통상자원부, 울산경제자유구역청) 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: 예비타당성조사 →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(12개월) → 기본 및 실시설계(12개월) → 공사시행(3년)		
⑩ 자원조달방식	○ 지원형태 : 보조(국비/지방비 매칭) ○ 자원분담 : 국고, 지방비 ○ 국고지원 비율(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) : 50% ○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: -		
⑪ 사업운영체계	○ 운영주체 : 울산경제자유구역청 - 국비(50%)와 지방비(50%)를 투입하여 도로 개설, 「도로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시설물을 인계하여 운영 ○ 운영방안 :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운영(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) ○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: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운영		

⑫ 사전용역	○ 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R&D비즈니스밸리 지구간 연결도로 개설로 울산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○ 비즈니스지구내 위치한 경부고속철도 KTX역과 R&D지구내 위치한 HTV일반산업단지간의 접근성 향상

<예비타당성조사>

환경부

8.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(홍수방어)(수자원, 하천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7,631억원 (국고:7,631억원)	③ 사업기간	'24년 ~ '29년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
	담당기관		
⑤ 사업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형산강 국가하천 유역은 제내측의 표고가 낮고 범람구역이 광활하여 치수위험성이 크게 잠재되어 있으며, 급속한 도시화 진행으로 홍수방어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는 구간임. ○ 또한, 형산강 하류 중금속 오염토 검출구간(연일대교 하류구간)과 지역사회(하천내 수목 및 퇴적토 제거 요청)의 홍수피해 불안감 해소(경주시 기계천 합류점 등 전구간)를 위한 하도정비 시행 필요 ○ 이에, 국가하천 형산강에 대해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의 축제 및 보강과 퇴적구간에 대한 준설사업을 통해 치수안정성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코자 함이 목적임 		
⑥ 성과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지표명: 국가하천 홍수방어(치수안정성 확보) ○ 측정 산식 : 다차원법(경제성평가), 하천정비 개수율 산정(하천일람 등) ○ 측정 방법 : 치수경제성, 홍수위험구역 경감 		
⑦ 추진경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천법 제25조(하천기본계획) - 하천법 제27조(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·보수) - 형산강 하천기본계획('23. 12 고시예정) ○ 사전절차 추진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3년 : “형산강 하천기본계획(변경)(13.05.28)” 고시 - 2023년 : 형산강 하천기본계획(변경) 용역 고시예정 (12월) 		

⑧ 사업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내용 :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(수자원 하천) ○ 사업물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방축제 및 보강 : L=49.82km, 준설 V=12,578천 m³, 구조물 1식 *(제 방) 형산강 : 49.82km *(준 설) 형산강 : 12,578천 m³
⑨ 사업추진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수행주체 : 국가
⑩ 자원조달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형태 : 직접시행 ○ 자원분담 : 국고 100%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전액 국비 ○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: 국비
⑪ 사업운영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주체 : 국가(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) ○ 운영계획 : 하천법 제27조따라 국가하천인 형산강에 대한 홍수방어대책(하도준설, 제방보강 등) 사업은 하천관리청인 국가(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)에서 시행
⑫ 사전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홍수방어 개선효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제적 홍수방어시설물(제방 등)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- 치수사업 시행으로 계획빈도 홍수시 외수에 의한 기존 형산강 국가하천구간에 대한 침수 토지에 대한 침수경감 효과 -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자산 증가 등을 고려한 치수안정성 확보

<예비타당성조사>

산업통상자원부

9.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① 사업명 (유형)		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(건설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	29,528.5억원 (국고 8,168.8억원, 지방비 888.2억원, 민자 20,471.5억원)	③ 사업기간	'25년~'30년 (6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	
	지자체·기관			
⑤ 사업목적	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목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규모 CCS 실증을 통해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, CCS 수출산업화를 위한 국내 산업기반 및 생태계 조성 ○ CCS 전과정(포집·이송·저장)의 시설* 구축·운영을 통한 CO₂ 감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포집시설, CO₂허브터미널, 해상플랜트(해양플랫폼, 해저파이프라인, 주입정/관측정, 지중저장소) 등 ○ 포집·저장·수송 등 요소 기술별 R&D 성과 통합·연계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○ CO₂ 누출 모니터링, 해양환경 안전성 평가 체계 확립 		
⑥ 성과지표	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 성과지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간 120만톤의 CO₂를 저장하기 위한 대규모 CCS 시설 구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도출 ○ 인프라 구축, CCS 기술혁신, 안전성·수용성 제고 등 사업목적 고려하여 적절한 양적·질적 지표로 구성 		
⑦ 추진경위		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근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법적근거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기본법」,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, 「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법」,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「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(24. 1. 9 국회 본회의 통과) ○ (국정과제) “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” 중 “24번 과제”에 CCS를 포함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상용화를 명시 ○ (상위계획)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(‘23. 4), “제1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기본계획(‘23~’32)(‘22.12)” 등 상위계획에 부합 		

⑧ 사업규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 사업
- 사업기간 : '25 ~ '30(6년)
- 총사업비 : 29,528.5억원(국고 8,168.8 / 지방비 888.2 / 민자 20,471.5)

(단위 : 억원)

구분	사업 내용	총사업비	국고	지방비	민자
	총합계(A+B+C+D)	29,528.5	8,168.8	888.2	20,471.5
대규모 CCS 시설 구축/ 운영	포집플랜트	8,896.2	1,334.2	-	7,562.0
	CO ₂ 허브터미널	3,140.9	825.0	-	2,316.0
	해상플랜트	9,966.0	3,082.2	-	6,883.8
	CCS안전관리센터	752.9	200.0	552.9	-
	소계(A)	22,756.0	5,441.4	552.9	16,761.8
기술 혁신	CCS 기술 혁신	3,408.0	985.0	80	2,343.0
	안전모니터링·평가기술개발·실증	1,178.4	978.4	200.0	-
	소계(B)	4,586.4	2,163.4	280.0	2,343.0
예비비(C)		1,943.0	521.0	55.3	1,366.8
사업운영관리비(D)		243.0	243.0	-	-

□ 사업내용

- 국가 주도 선제적인 CCS 인프라 구축 및 기술혁신 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진입장벽 해소 및 CCS 신산업 창출 지원

< 사업개요도 >



⑨ 사업추진체계

□ 사업 추진 체계

<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>

구분	역할 및 기능
부처 (산업부·해수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 추진 관련 정책적 판단 및 의사결정 사업예산 확보 및 총괄관리
지자체 (울산시, 부산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예산 확보 등
전문기관 (KETEP, KIMST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괄협의체 간사업무 수행 및 실증사업단 관리
동해CCS 실증사업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혁신/인프라조성 부문 사업관리 사업 종료 이후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
자문위원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혁신, 시설구축 등 관련분야 자문

⑩ 자원조달방식

- 지원형태 : 정부 출연, 지방비, 민간 투자
 - 재원분담 : 29,529억원(국비 8,169, 지방비 888, 민자 20,472)
 - 국고 지원 비율(산업부/해수부)
 - 총사업비의 24.1%(산업부), 3.5%(해수부) 지원
 - 지방비 비율(울산시, 부산시) : 총 사업비의 3.0%
 - 민간 투자 비율 : 총 사업비의 69.3%

⑪ 사업운영체계

사업운영체계



운영주체별 역할

구분		구성	역할
정부 정책 지원	총괄 협의체	산업부/해수부	사업관련 방향성·정책수립 등
		지자체	사업관련 방향성·정책수립 협조 등
		KETEP/KIMST	간사업무 수행
사업 운영	사업단	추후확정	기술혁신, 인프라조성 과제 관리
	자문 위원단	CO ₂ 포집 분야 전문가	기술혁신, 시설구축 등 관련분야 자문
		CO ₂ 저장/운송 분야 전문가(기술/설계 등)	
		건설공사 관련 전문가	
안전 분야 전문가			
⑫ 사전용역	<input type="checkbox"/> 수행		
⑬ 사업기대효과	<input type="checkbox"/> 기대효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CCS 산업 가치사슬 연계 활성화를 통해 先 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 ○ CCS Value Chain에 해당되는 기업의 신규 고용 창출, 전후방 산업 인력양성, 양질의 일자리 창출 ○ 연간 120만톤 CO₂ 감축을 통한 NDC 달성 기여 ○ 지역을 중심의 인프라 구축으로 CCS 핵심 거점 도약 		

<사업계획 적정성 검토>

환경부

10.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

[주무부처 사업계획서]

1 사업계획(안)

① 사업명 (유형)	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(환경부문, 폐기물처리시설)		
② 총사업비 (국고)	9,078.80억원 (국고 : 2,723.63억원)	③ 사업기간	2019년 ~ 2029년 (11년)
④ 추진 주체	주관부처		
	지자체 · 기관		
⑤ 사업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 발생 생활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에서 약 900톤/일을 매립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, ○ 2020년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핵심과제인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, 발생지 책임원칙의 정책방향과 2021년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5] 1호라목7) 개정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는 법적규제에 따라 정책방향 부합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이 시급하며, ○ 서울특별시의 협소한 면적, 인구 과밀화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,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도모, 시설의 관리기능 강화, 경제적 측면 및 운영측면의 효율성을 고려한 광역화 시설 계획 ○ 현대화된 처리기술 도입, 주민 수용성 고려한 시설계획을 마련하여 선진화된 청소행정 실현, 안정적 폐기물처리, 주민 친화적인 시설을 건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		
⑥ 성과지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지표명 : 1,000톤/일 광역자원회수시설(소각시설) 설치 ○ 측정 산식 : 건설 성과지표 대비 실 이행을 측정 ○ 측정 방법 : 절차 이행목표(이행율/목표율) 선정 및 이행, 성과 분석, 각 공종별 월별(분기) 집행율 측정 		
⑦ 추진경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근거 - 폐기물관리법 제4조, 제5조, 제14조 및 제29조 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-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(2011. 02.) -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(2023. 01.) - 제2차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시행계획(2023~2027) - 서울특별시 중기 지방재정계획
⑧ 사업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사업 : 폐기물처리시설(소각시설) 1,000톤/일 ○ 사업물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지면적 :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면적 2,961,859㎡ 중 21,000㎡ - 시설용량 : 광역자원회수시설(소각시설) 1,000톤/일
⑨ 사업추진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수행주체 : (지자체)서울특별시
⑩ 자원조달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형태 : 보조(국고보조 및 지방비 조달) ○ 재원분담 : 국고 2,723.63억(30.0%), 지방비 6,355.17억원(70.0%) ○ 국고지원 비율(회계구분) : 30.0% (환경개선특별회계) ○ 시설운영비 총당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폐기물처리수수료(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등) 및 지방비
⑪ 사업운영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영주체 : 서울특별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하여 시설 건립, 지방자치단체(서울특별시)에서 운영방안 마련 ○ 운영방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부 「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」 기준을 준용하여 소장, 관리팀, 운전팀, 정비 및 실험실, 기타 운영요원을 포함한 69인으로 운영하고 지침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(특급,고급,중급,초급숙련기술자)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- 24시간 연속운전하는 자원회수시설 특성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중앙제어실 등 4조 3교대 기준으로 운영

⑫ 사전용역	○ 수행
⑬ 사업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적 측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매립 제로화 정책 부응 -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국민 환경권 보장 - 경관적, 친환경적 측면 고려한 시설계획 및 지하화 계획으로 주변의 2차 환경 문제 최소화 및 도시미관 향상 - 광역화시설로 환경오염물질 집중감시 기능 확보 - 소각여열 활용한 대체에너지 확보로 온실가스 감축효과 -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에너지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 ○ 경제적 측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광역시설로 집적화된 폐기물 처리로 시설 운영비 절감 - 소각 여열 활용한 전력생산 및 지역난방공사 열원공급으로 경제적 측면 최대한 확보 -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인재 고용 등 환경산업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○ 사회적 측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혐오시설 이미지 소각시설의 현대적 이미지 개선, 지하화 계획으로 주민 인식 전환 - 2020년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,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(2026년 1월 1일부터), 발생지 책임원칙 정책 부합, 폐기물 대란 사전 대비책 확보 ※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,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원천적인 해결가능